



#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

정 형 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 (hgjeong@kiep.go.kr, Tel: 3460-1127)

나 승 권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원 (skna@kiep.go.kr, Tel: 3460-1130)

1.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
2.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실천수단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
3.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
4. 결론

## 주요 내용

- ▶ 전 세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, 중국, 홍콩, 싱가포르 등 동북아 경제권 내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.
- ▶ 신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‘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법인세 인하, 제로베이스 규제개혁, 서비스업의 선진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업정책 및 규제완화는 경쟁국 수준으로 일시에 전국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.
- ▶ 따라서 선진 경쟁국과의 속도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국내규제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 (특히 서비스산업) 등에서 외국자본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.
- ▶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제자유구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신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- 운영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역할 강화 및 상시적 운영체제로의 전환, ②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, ③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 공식적인 협의 채널구축 및 협의 메커니즘 강화 등이 필요함.
-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으로 ① 국내기업의 수도권 투자규제의 적용배제, ② 각종 특례제도의 경쟁국 수준 보장, ③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규제완화 시행, ④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함.
- 효율적 국고지원을 위해 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지원 수단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부처간 협력 체제의 강화, ② 지역별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, ③ 개발이익의 구역 내 재투자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.
- ▶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① 6개의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, ② 이를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장기비전 제시 및 지원, ③ 해당지역의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발전전략 수립, ④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외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## 1.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

■ 경제자유구역은 각종규제의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개념임.

- 초기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실현하기 위한 비즈니스 허브 개념에서 시작되었고,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,

- 6개 구역으로의 확대지정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특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, 각종 규제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산업(주로 서비스업)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가 주요한 목적임.

◦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정책 및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에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함.

◦ 각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서로간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지역 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.

-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주거, 상업, 관광, 산업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산업단지 혹은 도시개발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.

■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고 있어 2010년경에 이르면 주요 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의 경우 아직 개발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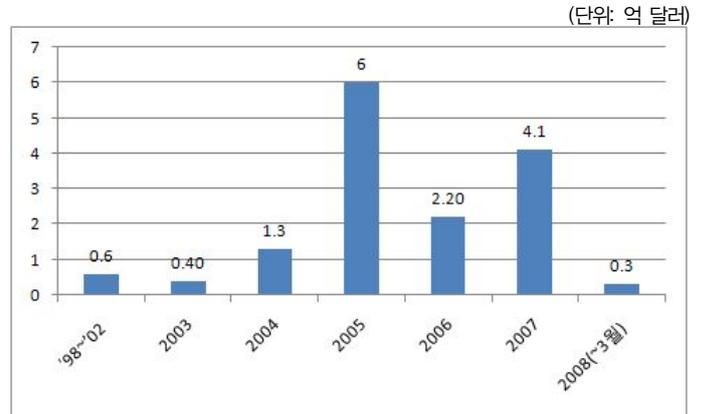
■ 또한 3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는 아직 개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전체 사업투자액 중 외자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- 경제자유구역은 아직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그 원인으로는 개발속도 저체·투자환경 경쟁력 미흡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음.

◦ 2008년 3월까지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투자예정액

475.8억 달러 중 외국인 투자예정액은 92.7억 달러로 전체 투자예정액의 2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신고된 경제자유구역 내 FDI 유치액은 14.9억 달러에 그침.

그림 1. 경제자유구역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



주: 2008년 3월 말 기준.  
자료: 각 경제자유구역청.

◦ 우리나라 전체 FDI 중 경제자유구역내 FDI가 차지하는 비중도 2~3%에 불과함(2003년 0.6%, 2004년 1%, 2005년 5.2%, 2006년 2.0, 2007년 3.9%).

◦ 또한 아직은 투자유치 실적의 대부분이 업무지구 개발, 물류 인프라 건설 등 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, 입주기업 유치는 10% 미만에 그치고 있음.

■ 정부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, 외자유치 촉진, 경제자유구역간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 2008년 황해(평택·당진), 새만금·군산, 대구·경북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음.

## 2.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실천수단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

■ 새 정부는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'활기찬 시장경제'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, 제로베이스 규제개혁, 신성장 동력 확보,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제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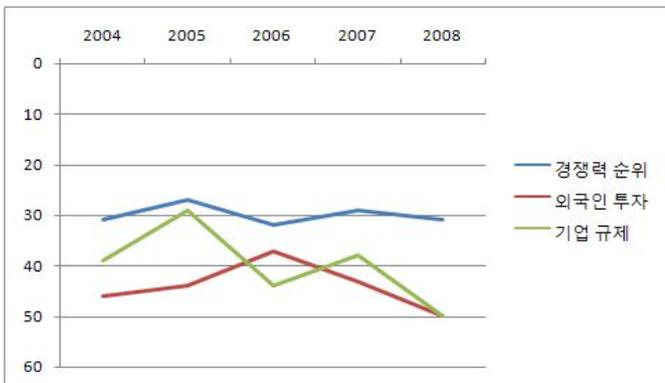
-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,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확립,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, 최고급 의료시설 확충 및 영어의 생활화 강화 등을 제시함.

- 규제개혁방안으로는 수도권 규제합리화,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을 제시하였고,
-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각종 신기술·신산업의 창출,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개발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,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음.
-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핵심문화콘텐츠의 집중육성 및 투자확대,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, 의료산업 및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, 세계일류 IT 인프라 구축,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함.

■ 현재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2008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인투자(50위), 기업규제(50위) 등의 요인에서 국가경쟁력 평균(31위)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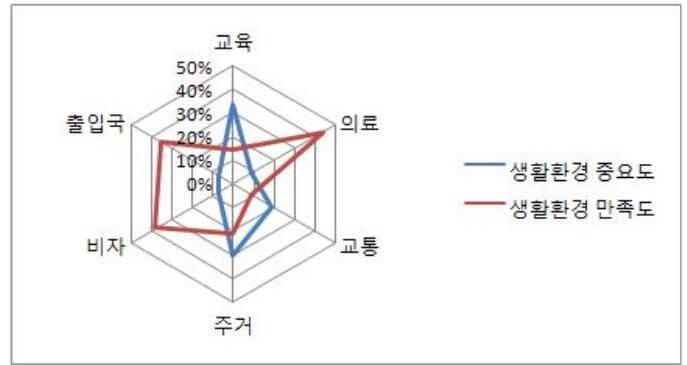
그림 2. 외국인투자 및 기업규제 부문 경쟁력 순위(IMD)



자료: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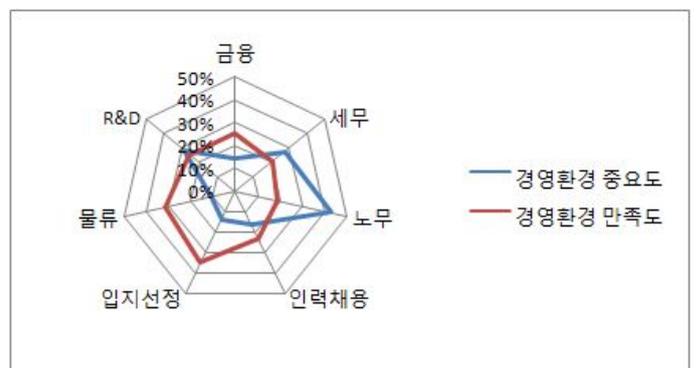
- 특히 경영환경(투자인센티브 등) 및 정주환경(교육 등) 분야의 경쟁력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,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2006년 Invest Korea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, 외국인생활환경 결정요인 중 교육 여건과 노무관계가 그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.

그림 3. 국내생활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가



자료: Invest Korea(2006), 『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』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.

그림 4.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가



자료: Invest Korea(2006), 『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』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.

■ 신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'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법인세 인하, 제로베이스 규제개혁, 서비스업의 선진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, 이와 같은 기업정책 및 규제완화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일시에 전국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.

- 따라서 선진 경쟁국과의 속도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국내 규제에 의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(특히 서비스 산업)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.

■ 최근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 확대,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용성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업그레이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.

### 3.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추진을 위한 정책과제

#### 가. 정부 및 지방차원의 효과적인 운영체계의 구축

표 1.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체계

기 관		기 능
중앙정 부	경제자유구역 위원회	자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개발사업자의 실사계획을 심의·의결하는 기관
	경제자유구역 기획단	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
자자체	경제자유구역청	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민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행정기구

#### 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기능의 확대 및 정비가 필요함.

-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경우 상시적인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·의결을 위해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(3년여 기간 동안 총 25회 개최), 일부 부처의 경우 참석율이 저조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 재구성의 검토가 필요함.
- 싱가포르 EDB(Economic Development Board)의 경우 행정 조직과 함께 심의·의결 조직을 기구 내에 갖추므로써 자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며, 위원으로 다국적기업 CEO 7명, 노총 부위원장 1명이 참가하여 외자기업의 필요사항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.
- 따라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안 및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,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#### ■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의 조직 강화 필요

-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업무적·행정적으로 지원하고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가고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이나,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.
- 특히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이들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.

#### ■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, 독립성, 법적 책임성 확보

-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도지사 및 시의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,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.
  - 각 구역청 인력의 상당수가 2년 미만의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.
  - 또한 민간 전문가의 초빙에 있어서도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따르고 있어,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.
-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하여 전문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, 외부채용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되어야 함.

#### ■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경제자유구역청 간 공식적인 협의체널 구축 필요

-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각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가적인 발전비전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·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정역할이 필요함.
- 또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중앙 경제자유구역 기획단과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#### 나.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

#### ■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 규제조치의 적용 배제 검토 필요

- 현재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규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음.
  -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과밀억제권역(인천)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여타지역의 3배 중과되고 있으며, 대학 및 대규모 시설입주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여 개발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.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과밀억제지역·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·증설을 제한하고 있음.

-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대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조치가 국내투자기업에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.

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

- 싱가포르는 1998년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WCUP(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) 계획을 수립 및 발전시켰으며,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.

-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 허용
- 대학원의 경우 분교 및 본교형태의 설립제한 철폐
- 학교운영에 대한 무간섭
-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학제한 철폐
- 해외 송금 허용 등의 조치 강구
- 비영리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및 보조금 지원

- 싱가포르의 WCUP 사례를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내 세계 top 10 대학의 유치를 위해 외국학교 유치 및 교육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·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.

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방안과 집단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함.

-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조합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, 노동자 파업은 물론 5명 이상 모여 집회를 여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노조활동을 규제하고 있음.<sup>1)</sup>

- 싱가포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,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채용 및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- 노사관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 ① 불법파업 등에 대한 공권력의 즉각적인 대응 및 ② 노동위원회 조정 및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행정에 대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노사문제로 인한 투자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시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■ 경제자유구역법에 유사특별법령에 의한 투자유치 지원 및 규제완화 특례제도를 준용하는 등 특별법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성공적인 특구사례의 하나인 두바이의 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(JAFZ)의 경우 무세금(관세·법인세·소득세·지방세 등), 무제한 외환거래, 무 스폰서비용, 무 노동쟁의와 같은 4무(無) 정책은 입주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임.

- 반면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기업·혁신도시, 새만금, 제주특별자치구 등 유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높은 부문이 존재하여 규제완화 시험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.

- 따라서 유사제도에서 시행 중인 특례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준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국내 입주기업·기관 및 국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배제되었던 조세감면 조항을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
- 토지상환 채권발행의 허용, 주택공급 특례, 광역교통개선의 수립 특례, 공유수면매립 특례 적용
-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·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
- 관광·레저 환경의 개선을 위해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및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

-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negative list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함.

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함.

-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취득세, 등록세 경감 등 할 수 있는 지원 및 규제완화 사항이 있으나 개선을 회피하고 있음.

-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1) Tan Kim Song(2006. 6. 6), "From Free Economic Zones to Regional Business Hubs: The Singapore Experience."

- 행정기구(경제자유구역청)에 위임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위임
- o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무위임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- 정부의 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6개로 확대되어 있어 각 지역별로 지원될 수 있는 정부보조금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음.
-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바와 같이 각 구역별 제도개혁 및 운영 추진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정부지원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.

**다.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개선**

**■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발이익이 구역 내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.**

-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지 않아<sup>2)</sup> 탄력적인 투자가 곤란하고, 구역 내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지역의 사업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, 관련재원이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,
- 부지매각 수입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수입이 구역 내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
**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국고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**

- 각 부처 소관의 국고지원사업 선정시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-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모든 국비지원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·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.
- 외국 연구소, 교육기관 등 비수익성 사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**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또한 효율성·경제성에 근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, 각 지역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.**

**라. 효과적인 외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**

**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체계가 개발사업 중심에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비·강화될 필요가 있음.**

- 최근까지도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초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원체계 또한 아직 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음.
-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핵심목적이 외자유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인프라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,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함.

**■ 싱가포르 EDB(Economic Development Board)와 아일랜드 IDA(Industrial Development Agency)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외자유치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**

- 외자유치 관련 정부조직은 관련업무에 따라 지식경제부(투자정책관, 경제자유구역기획단), 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국토해양부, 지방자치단체(광역자치단체)에 분산되어 있으며, 이들 간의 연계체계는 미비함.
- 외국의 선진사례(싱가포르, 아일랜드 등)의 경우,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와 외자유치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하거나 여러 기관이 담당할 경우 통합적인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외자유치관련 정책의 조율과 통합, 조정, 연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.

2) 지자체 기타 예산과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됨.

## 4. 결론

■ 각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중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- 기존 3개 지역의 경우는 IT·BT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각 각 특화할 필요가 있음.

- 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은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물류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, 역내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전략이 적절함.
- 인천의 경우는 서울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IT, BT 중심지로 중점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.

- 추가지정 대상지역의 경우 지역 내 산업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함.

- 추가지정 지역의 물류기능은 독자적인 중심지화 보다는 인천공항, 부산·광양항 등 핵심 물류중심지와 효과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.
- 단기적으로 지역 내 외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(황해, 새만금·군산), 조선(새만금·군산), 부품소재(대구·경북)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,
- 서비스, 관광·레저 부분은 향후 개발성과 및 외자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■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화전략 및 브랜드화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함.

- 각 경제자유구역은 아래와 같이 서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.

표 2. 각 경제자유구역별 주력분야

지역		주력분야
기 존	인천	국제금융, 관광레저, 비즈니스, IT·BT
	부산·진해	해운물류, 자동차, 기계, 조선
	광양만	해운물류, 소재산업
신 규	황해	첨단산업(자동차부품, IT, BT), 부가가치 물류
	대구·경북	국제교육, 건강·의료, 게임, IT, 부품·소재
	새만금·군산	자동차, 항공, 첨단부품소재, 신재생에너지, 바이오

자료: 경제자유구역기획단.

- 그러나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각 지역의 중점 개발방향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지역 브랜드화가 필요함.

- 따라서 정부는 각 지역이 주력분야별로 차별화·중심지역화될 수 있도록 장기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.

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, 경제자유구역이 각 광역경제권의 개방과 규제완화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.

-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선정된 ‘광역경제권 발전전략’은 전국을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대경(대구·경북)권,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고자 함.

- 향후 각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에 권역 내 위치한 각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과가 광역경제권 내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고,

- 각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에 따라 규제완화 등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경제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음.

■ 한편 외자유치성과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정책이 총액위주의 양적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.

- 경제자유구역 내 본격적인 기업유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.

◦ 두바이특구(Jebel Ali Free Zone)의 경우 출범 초기인 1985년에는 단 30개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으나 200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5,000여 개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음.<sup>3)</sup>

- 따라서 현재의 외자유치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외자유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, 다소 유치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개발내용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3) Ibrahim M. Al Janahi(2006. 6. 6), “Regional Business Hub: Case of Dubai’s JAFZA.”

-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국내투자환경의 전략적인 홍보 및 국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- UNCTAD, OECD 등 FDI 관련 국제투자환경평가기구의 방문시 적극적인 홍보, 관련포럼 개최, 투자관련 정보의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,
- 외국인투자에 따른 성공사례의 적극적 전파, FDI 관련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한 보다 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